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존의무」의 실현에 관한 고찰

洪完植

(법학박사, 국회도서관 연구관)

< 목 차 >

I. 서론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환경보존의무
II. 「환경」의 개념	2. 국가의 환경보존의무와 과소금지의 원칙
III. 헌법상의 환경조항 및 그 규범적 의미	3.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와 관찰의무
1.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V.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조항	1.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3.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	2.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국가의 환경보존의무	VI. 결론

I. 서론

산업혁명 이후 급성장한 세계경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성장의 부산물로서의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만 매진하여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이라는 상황에 접하여 환경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이제는 생존을 위한 지구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환경의 파괴를 문제삼고 대처의 필요를 느낀 것은 스톡홀름에서 1972년에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에서의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들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1979년 10월의 「자연보호헌장」의 선포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미약하지만은 확산되어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채택한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정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다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환경면에서의 국제적 동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¹⁾인데, 이는 근자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대표한다.

우리나라도 환경보호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화학공업에 치중하게 된 산업구조를 추진하게 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수질과 공기 등의 환경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보호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1980년에는 제33조에 환경권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는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조항의 명문화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학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적인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성과의 기반 하에 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헌법상의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논의 및 연구들을 고찰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체계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II. 「환경」의 개념

환경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며 학문분야 및 용례마다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거나 환경법의 내용 및 서술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보호대상인 환경의 개념정의가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넓은 의미의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3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개념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²⁾

또한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에서의 환경에 대한 실정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환경을 제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환경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

1) 홍준형, 환경법, 2001, 25면.

2) 권병태/김명길, 환경법, 제2판, 2000, 52면;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1999, 24면.

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하여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적 정의는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2조의 개념정의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환경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환경정책은 모든 정책분야를 포함하게 될 것이고, 환경법은 모든 법질서를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광의의 환경개념은 환경보전의 영역을 모호하게 하고 환경보전의 정책목표와 실효성을 저해하여 환경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³⁾, 사회적 환경을 제외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환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II. 헌법상의 환경조항 및 그 규범적 의미

1.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며⁴⁾, 제3세대의 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인권의 발전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근대의 성립이후 자유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인권발달의 초기단계를 인권의 제1세대, 적극국가성이 강조되어 사회권이 강조되던 시기를 인권발달의 제2세대라고 한다. 환경권은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권리, 평화권 등과 함께 제3세대의 인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⁵⁾

이러한 제3세대의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1970년대 이후 각국 헌법상에 명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국 헌법상의 환경조항의 규정방식을 보면 대개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보호를 국가의 실현목표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984년의 오스트리아헌법과 1994년의 독일헌법을 들 수 있으며, 환경권을 기본권의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의 헌법으로는 1976년의 포르투갈헌법, 1978년의 스페인헌법, 1996년의 남아프리카공화

3) 김연태,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법적 효력, 판례연구, 제9호, 고려대학교, 1998, 205면.

4) 조홍식, 「인권을 넘어 생태권으로」, 현대사회와 인권, 1998, 484면.

5)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07면.

국헌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

우리나라 헌법은 1980년에 최초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제3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적지 않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조항의 형식을 기본인 권리로서 규정하며 또한 국민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규범형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드물다.⁶⁾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⁷⁾,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⁸⁾,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⁹⁾, “인간다운 환경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¹⁰⁾,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¹¹⁾,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수할 권리”¹²⁾ 등을 의미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이 규정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고 보아 대개 환경권의 일종으로 서술¹³⁾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주택문제는 사회복지의 대상이므로 그 규정의 위치가 헌법 제35조가 아닌 사회복지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4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헌법 제35조에 규정한 것은 환경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⁴⁾ 이는 헌법의 체계나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여부라기보다는 환경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내지 주거환경은 아파트 등 대단위주택단지의 개발로 인한 환경침해의 문

6) 이종영,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89면.

7) 허영, 한국헌법론, 2001, 425면.

8) 고영훈, 환경법, 2000, 56면.

9)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644면.

10)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752면.

11) 천병태/김명길, 앞의책, 74면.

12) 홍준형, 앞의책, 41면.

13) 권영성, 앞의책, 649; 김철수, 앞의책, 755면.

14) 홍성방,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헌법법학FORUM, 제5권, 1996, 65면.

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고 헌법규정 중에 따로이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없는 것을 살펴볼 때, 환경권의 일부내용으로서의 주거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헌법체계 하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3.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기본권의 분류와 관련한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엄성에 속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 행복추구권으로 보는 견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¹⁵⁾,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총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¹⁶⁾가 있다. 환경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법적 성격을 살펴보는 경우에도 환경권을 프로그램권리설, 추상적 권리설¹⁷⁾, 구체적 권리설¹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충돌시 해석상의 방법으로서 「생명권·환경권의 재산권에 대한 우위론」이 주장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환경권을 총합적 권리로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환경권은 재산권·영업권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환경권우위론은 환경침해라는 새로운 재산권침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적극적인 이론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

(2) 환경권의 효력

a) 대국가적 효력

환경을 오염시키는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기본권의 고유한 기능인 대국가적 방어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환경권침해행위로부터 방어할 권리가 부여된다.

15) 김철수, 앞의책, 752면.

16) 권영성, 앞의책, 646면.

17) 김철수, 앞의책, 753면; 고영훈, 환경법, 2000, 58면; 이상규, 환경법론, 1998, 37면; 대법원도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에 있다. 즉,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7. 7. 22. 96다56153 공1997 하2636).

18) 안용교, 한국헌법, 1989, 565면; 홍준형, 앞의책, 42면.

19) 권영성, 앞의책, 647면.

20) 김춘환, 「공권적 환경권이론」,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354면.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는 입법, 행정,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환경입법에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행정 및 사법부는 구체적인 환경입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상의 환경권조항에 구속되고,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환경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나 재판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란 구체적으로 국가의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영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폐수로 인한 환경의 오염, 오물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 공공기관의 방송시설 과다사용·군용전투기 등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²¹⁾

b) 대사인적 효력

환경침해는 국가에 의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환경의 직접침해의 비중과 해악보다는 오히려 사인에 의한 환경침해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인인 제3자인 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 허가함으로써 간접적 환경침해행위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에, 국가의 개별적인 허가행위 자체에 대한 환경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허가행위를 매개로 하는 사인의 환경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적용가능성의 문제 즉,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의 대국가적 효력도 중요하지만,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권은 사인상호간에도 직접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이루어진 경우에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인에 대하여 동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서도 환경오염의 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국가와 기본권의 주체인 사인, 기본권의 침해자인 사인간의 3각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상호간의 기본권의 효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차원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즉, 사인에 의하여 환경오염이 이루어진 경우에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인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배제나

21) 허영, 앞의책, 429면. 허영교수는 이 외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청구권”도 환경권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도 헌법 제35조의 환경보전의무를 근거로 하여 오염된 환경을 배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환경보전의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본권은 공권력행사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권은 모든 법분야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객관적인 가치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²²⁾ 이를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Doppelcharakter) 내지 양면성이라 부른다. 이렇게 기본권이 객관적인 가치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도출되는데,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하여 기본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지위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²³⁾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을 사인인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²⁴⁾,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이는 국가에 버금가는 사회세력의 성장이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낙태, 아동학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피수용자의 인권침해, 환경침해 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많은 영역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35조 제1항 앞문장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라는 환경권조항 자체로부터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인 환경권보장의무 또는 환경보전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환경권보장이라는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으로부터 제3자의 환경오염행위에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환경보전입법의 부작위를 통한 환경보전의무의 불이행 자체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²⁶⁾이다. 즉,

22)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결정을 지니고 있으며 제3자적 효력을 긍정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최초의 사례로는 Luth 판결을 들고 있다. BVerfGE 7, 198ff.; 참고, 「재판소원의 기본권보장에의 실용성」,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285면; R. Alexy,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objektive Normen」, Der Staat, Bd.1, 1990, S.49.

23) J. Dietlein,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1992, S.17.

24) K.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 S.946.

25) J. Isensee, Das Grundrechte auf Sicherheit, 1983, S.34.

26) 홍준형, 환경법, 2001, 54면.

환경보전법률의 개정에 충실치 않아서 효과적인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의 논의대상이 되겠지만, 환경보전법률의 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소한의 환경보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즉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헌법 제35조 제1항은 뒷문장은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에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와 과소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기본권을 단순한 방어권으로 보거나 객관적 가치질서의 존재부분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건이나 상태 등을 형성하도록 입법자나 행정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²⁷⁾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행에 옮겨지게 되며²⁸⁾,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작용을 하게 된다.

환경권의 보장 또는 환경보전의무의 실현이라고 해서 다른 법익이나 권리와는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익 및 권리와 조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헌법은 환경보전의무라는 목표만 정해주었지 상세한 환경보전의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이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²⁹⁾ 그러나, 환경관련법률이 헌법상의 환경보전의무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수 있다. 환경보전입법을 행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환경보전의무의 이행에 충실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기준으로서 「비례(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과 함께 「과소금지(Untermaßverbot)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면서, “국가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27) 이종영,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110면.

28)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현대 공법학의 제조명(김남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397면.

29) 출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10권, 1998, 555면.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방법 및 그에 관한 현재의 판단기준을 적시하고 있다.³⁰⁾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와 관련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입법을 행함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입법자가 환경보전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한계³¹⁾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Mindestforderungen)도 충족되지 못하는 환경보전입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와 관찰의무

(1)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Nachbesserungspflicht)란 입법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출현하여 입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화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입법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자는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³²⁾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를 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개선의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³³⁾. 이러한 법률개선의무가 입법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에 상응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은 헌법에 합치하지만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⁴⁾. 환경분야는 산업과 경제의 고성장으로 인하여 침해의 규모가 크고 그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환경여건에 비추어 입법자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예방 및 보전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는 이와 같이 환경법의 입법당시에는 만족되었지만 과거의 환경보호대책들로서는 변화된 환경침해상황에서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과거의 법률을 대체하거나 개선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의무로 설명되어지고 있다.³⁵⁾

30) 헌재 1997. 1. 16. 90헌마110·136(병합),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1997, 93면.

31) BVerfGE 88, 203(245).

32) BVerfGE 49, 89(130).

33)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2, 1994, S.1158;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 S.1315.

34) Pestalozza, Chr.,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Bd. I, 1976, S.556.

(2) 입법자의 관찰의무

또한 입법자에게는 법률개선 의무 이외에도 관찰의무(Beobachtungspflicht)가 있다고 한다. 관찰의무란 입법자가 입법권의 한계 내에서 법률의 실제적인 규범력을 측정·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계획적으로 조사, 수집,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³⁶⁾ 이러한 관찰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입법자는 법률의 실질적인 효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⁷⁾ 이러한 관찰의무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환경정책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도 입법자의 관찰의무의 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떤 나라가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것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되느냐에 대한 척도가 된다³⁸⁾고 한다면, 입법자의 관찰의무의 성실한 수행여부가 입법정책의 성공 특히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균형잡히고 성공적인 환경보전입법을 갖추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한차례의 입법이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전부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환경법이 효과적으로 환경보전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수시로 수행하며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입법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자의 관찰의무와 법률개선 의무가 강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의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V.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광의의 환경법과 협의의 환경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만이 아니라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포함한다고 한다.³⁹⁾ 환경보전

35) 정태호, 앞의 논문, 398면; 참고, 556면.

36) BVerfGE 88, 203(310).

37) 참고, 557면.

38) 홍준형, 앞의 책, 88면.

을 위한 환경법체계는 여러 정부부처 및 업무영역이 상호연관성을 강하게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개념을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을 기준으로 환경법을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법률의 내용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환경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법의 시초는 1960년대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을 들 수 있다. 전문이 21개 조문인 공해방지법은 규제내용의 미흡, 후속입법의 불비,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법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1977년 12월 31일에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된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비록 이 법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실질적인 규범력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법의 제정은 단순한 공해방지의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입법에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소관의 환경관련법은 약 30여개, 타부처소관의 환경관련법은 약 50여개에 이른다.⁴⁰⁾

2. 환경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환경법규의 체계성 및 효율성의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이외의 환경관련법들은 거의 전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을 규제하며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⁴¹⁾, 행정법적인 차원에서도 환경법은 규제행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²⁾ 즉, 환경법영역은 환경형법을 위주로 하는 처벌체계와 기업의 규제를 주로 하는 환경행정법체계의 골격을 지닌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법체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⁴³⁾ 현재의 환경관리가 직접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적 유인제도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경제메카

39) 환경부, 환경백서, 2000, 32면.

40) 환경부, 앞의책, 34면 이하.

41) 이강혁,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외법논집 제2집, 한국의국어대학교, 1995, 13면.

42)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01면.

43) 조병선,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와 전망」, 한국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III), 1998, 682면.

니즘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세⁴⁴⁾나 배출권거래제도⁴⁵⁾,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협약에 의한 환경관리수단의 도입타당성이 적극적으로 논의⁴⁶⁾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때 그때의 상황적 필요에 의하여 비체계적으로 입법된 환경관련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⁷⁾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첫째는 비체계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⁴⁸⁾ 현재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복수의 환경법체제는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어 환경정책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⁴⁹⁾ 따라서 산재한 환경개별법과 환경관련조항들을 통일된 원칙에 따라 정리⁵⁰⁾하여 환경법을 체계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범자이자 환경파수꾼인 일반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규범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광대역적인 속성상 환경문제는 UN 등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통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며, 국내법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대한 적용력을 지닌 국내입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¹⁾ 환경권의 보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수동적인 입법적 대처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법제를 선도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면하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되어 「국제환경법」 분야가 발전하고 이러한 국제법적 환경은 국내법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가 각종 환경조약 등에 가입함에 따라 이들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미치게 되고 이로써 환경법의 法源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다.⁵²⁾

지금까지의 환경법은 주로 오염발생 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44) 이종영, 「환경세의 기능과 효과」, 환경법연구, 제19권, 1997, 75면 이하.

45)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온실가스배출한도가 부여된 국가간 실제배출량과 할당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46) 환경부, 앞의책, 88면.

47) 홍성범,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한림법학FORUM, 제5권, 1996, 67면.

48) 노상환/송상현/조홍식,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I, 1997, 26면 이하.

49) 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I -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1998, 3면 이하.

50)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법전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 김세규(역), H. Sendler, 「행정절차법과 환경법전」, 동아법학, 제25호, 동아대학교, 1999, 278면.

51) 우리나라 환경법체의 개혁방향으로 ① 환경법체의 통합화 ② 환경법체의 민주화와 더불어 ③ 환경법체의 국제화가 주장되고 있다.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1996, 286면 이하.

52) 홍준형, 앞의책, 32면.

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측면에서의 법적 조치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⁵³⁾ 그리고 행정수단에 있어서도 주로 규제에만 의존하였다는 비판⁵⁴⁾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입법방향은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예방환경을 위한 법적 장치를 통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정보공개 강화

일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한 정보공개청구권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환경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환경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환경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행정절차법(VwVfG) 제29조에 의한 문서열람권(Recht auf Akteneinsicht)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환경정보공개법(Umweltinformationsgesetz, 약칭 UIG)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⁵⁾ 우리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동법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독자적인 환경정보공개법의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련법상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환경정보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송법체제로는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소송의 당사자가 수천, 수만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식 단체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식의 집단소송(Verbandsklage)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⁵⁶⁾ 이 제도들은 국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환경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소송자격을 주어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주자는 것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등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분쟁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거나 마련하는 것을 국가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⁵⁷⁾ 또한 단체소송제도가 입법되어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53) 김영삼/정사언, 「미국헌법상 환경권의 성립과 수질환경권」, 미국헌법연구, 제11호, 2000, 304면.

54) 허남오,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1996, 264면.

55) 김형철, 「공법상 환경정보청구권」,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0, 232면 이하.

56) 권영성, 앞의책, 653면; 오석락, 앞의책, 129면.

57) Winkelmann C., 「Die Verbandsklage im Umweltrech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eitschrift für Umweltrecht, 1994, S.13.

이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환경오염방지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⁵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에 집단소송법 시안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입법 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濫訴⁵⁹⁾,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될 수가 있지만,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자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제도를 입법하는 것은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의 이행에 속하는 것이다.

VI. 결 론

현대 법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사법의 구분 외에 사회법, 경제법의 법분야가 날로 각광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환경법은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법분야가 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환경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법의 중요성과 그 독립 영역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는 환경위기 또는 환경재앙이라는 현실에서 어떠한 정부나 개인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홀할 수가 없으며, 환경보호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전제요 현대국가의 공통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헌법국가는 법치국가, 사회국가임과 아울러 환경국가이어야만 한다⁶⁰⁾고 전망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정책 및 환경권의 기본권으로서의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관련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이론에서도 전통적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대사인적 효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환경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5조에서 환경권의 규정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에의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는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 모두를 구속하지만, 특별히 국가는 입

58) 김철용,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3권, 건국대학교, 1998, 17면.

59)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적절히 인정한 결과 소송의 남발은 없었고, 오히려 단체소송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철용, 앞의 논문, 17면.

60)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00면; 김세규/한규현,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23호, 1997, 280면; H. Hofmann, 「Die Aufgabe des modernen Staates und der Umweltschutz」, in: K. Kloefer (Hrsg.), Umweltstaat, 1989, S.36f.

법작용을 통하여 환경보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환경보존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과소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고,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와 관찰의무의 준수여부도 동 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은 입법자의 환경보존입법에의 의무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의 환경법은 고쳐야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개선방향의 중점으로는 환경법의 체계화와 환경침해의 예방을 포함한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환경정보공개 강화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여부도 입법자가 환경보존의무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參考文獻〉

- 강대식,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와 개인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
- 고영훈, 환경법, 2000.
- 고문현, 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 김세규/한규현,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23호, 동아대학교, 1997.
- 김세규(역), H. Sendler, 「행정절차법과 환경법전」, 동아법학, 제25호, 동아대학교, 1999.
- 김연태,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법적 효력」, 판례연구, 제9호, 고려대학교, 1998.
- 김영삼/정사언, 「미국헌법상 환경권의 성립과 수질환경권」, 미국헌법연구, 제11호, 2000.
- 김원주, 한국환경법학의 어제·오늘·내일, 2000.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 김철용,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독일공법분야의 단체소송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3권, 건국대학교, 1998.
- 김춘환, 「공권적 환경권이론」,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 김해룡,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권리구제」, 계명법학, 제5집, 2001.
- 김형철, 「공법상 환경정보청구권」,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0.
- 노상환/송상현/조홍식,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I, 1997.
- 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I -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1998.
- 법무부, 환경법의 쟁점과 동향, 법무자료 제164집, 1992.
- 안용교, 한국헌법, 1989.
-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1996.
- 이강혁,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1995.
- 이상규, 환경법론, 1998.
-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1999.
- 이종영, 「환경세의 기능과 효과」, 환경법연구, 제19권, 1997.
- 이종영,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현대 공법학의 제조명(김남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 조병선, 「환경법의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와 전망」, 한국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II), 1998.
- 조홍식, 「인권을 넘어 생태권으로」,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제2판, 2000.
- 허남오,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1996.
- 허영, 한국헌법론, 2001.
- 홍성방,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한림법학FORUM, 제5권, 1996.
-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 홍완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10권, 1998.
- 홍완식, 「재판소원의 기본권보장에의 실용성」,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 홍준형, 환경법, 2001.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
- R. Alexy,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objektive Normen」, Der Staat, Bd.1, 1990.
- J. Dietlein,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1992.
- H. Hasso, 「Technik und Umwelt」, in: E. Benda/ W. Maihofer/ H. 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2), 2. Aufl., 1995.
-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 H. Hofmann, 「Die Aufgabe des modernen Staates und der Umweltschutz」, in: K. Kloepfer (Hrsg.), Umweltstaat, 1989.
- J. Isensee, Das Grundrechte auf Sicherheit, 1983.
-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2, 1994.
-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
- Ch. Winkelmann, 「Die Verbandsklage im Umweltrech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eitschrift für Umweltrecht, 1994.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der Verwirklichung der Umweltschutzpflicht des Staates

Hong, Wan Sik

(Juristische Fakultät der Kon-Kuk Universität)

Umweltschutz ist die Staatsziel aller Staa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dieser Abhandlung wird die Verwirklichung der Umweltschutzpflicht des Staates untersucht.

Die Spannung von Umweltschutz und wirtschaftlicher Wachstumsvorsorge wiederholt sich immer auf der Ebene der Grundrechtsgarantien. Das Umweltrecht als Grundrecht ist ein Grundrecht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as Umweltrecht oder der Umweltschutz als Staatszielbestimmung ist in die Verfassung in den vielen industriellen Staaten eingefügt worden. In unserem Staat ist das Umweltrechtsbestimmung als ein Grundrecht in der Verfassung nach 1980 eingefügt.

Umweltrecht ist eigentlich das Abwehrrecht vor dem Staaten. Aber werden die umweltbelastende Vorhaben meist von Privaten betrieben. Deswegen kommt eine Drittwirkung des Umweltgrundrechts gegen Privaten in Betracht. Daraus folgt, daß der Staat sich nicht nur rechtswidriger Grundrechtseingriffe zu enthalten, sondern die grundrechtlichen Schützgüter darüber hinaus schützen und fördern, insbesondere vor rechtswidrigen Eingriffen Dritter bewahren muß.

In unserem Staat muß sich die Umweltgesetzgebung weiter verstärkt werden. Die Systematisierung der Umweltgesetzbuch, die Einführung der Verbandsklage und die Verstärkung der vorbeugenden Umweltschutzmaßnahmen usw. sind die jetzige Aufgabe unseres Gesetzgebers.